

# 김부겸 불출마... 더민주 당권경쟁 3파전

### 추미애·송영길·이종걸 대결 예상... 박영선은 고심 중... 비주류 이종걸·박영선 단일화 가능성도

김부겸 의원이 23일 8월 당대표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이 3파전 구도로 변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발표를 통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남은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지금부터 그 역할을 진지하게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당권보다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로써 8월27일 당대표 선거의 구도는 유력 주자 3, 4명의 한파 승부로 흐를 가

능성이 커졌다.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무현·친문재인계와 가까운 추미애·송영길 의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당내 비주류인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도 출마할 것이라 관측이 많다. 여기에 김부겸 의원에겐 당대표 선거 출마를 권유해온 박영선 의원은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본인의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곧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당 비대위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종걸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출마할 경우 비주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내부 조율

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단일화가 되면 추미애·송영길·비주류 후보(박영선 또는 이종걸)의 3파전이 된다. 여기에 박 의원이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추미애·송영길·이종걸 의원의 3파전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출마하고 이종걸 의원의 단일화가 발발해 그처럼 4파전이 될 수도 있다. 주류 측 추미애·송영길 의원의 경쟁이 되는 것이다. 추미애·송영길 의원은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던 김부겸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김 의원이 비노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전대 항배는 예측불허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전에 (김부겸 의원과) 맥주 한잔하면서 (불출마의사를) 들었다면서 '일래부터 추미애 의원과 제가 경쟁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종걸 의원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과 송 의원은 현재 호남지역 표심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원내에서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에도 사활 건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성주 기자

## 계속되는 안철수의 '침묵 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계속 입을 닫고 있다. 23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방향강화 워크숍에 참석했지만 회의 내내 한마디도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연사인 김희삼 광주 과학기술원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고 다른 의원들도 관련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지만 안 대표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온 안 대표에게 기자들이 몰려갔지만 역시 그는 의례적인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안 대표에게 "오늘 김수민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관련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애써 외면하며 자리를 옮기려 했다.

"검찰 조사를 주시하겠다"던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도 하지 않고 "요즘 제가 계단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동문서답만 남긴 채 계단을 통해 자리를 피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흘째 침묵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김수민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이 김 의원의 검찰 출석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여기에서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 나오면 단호히 처리하겠다. 이게 새정치"라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의 침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그간 안 대표가 강조했던 새정치가 이같은 침묵 정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이성주 기자

## 심상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원포인트 국회 다음주 초 열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3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논란과 관련, "이런 논란과 잘못된 현실에 종지부를 찍고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다음 주 초에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무위를 열고 "정부가 끝끝내 6월30일을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점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특조위는 정부 부처가 그 활동 내용에 대해 감파라 배려라, 활동 그 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는 여당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2015년 8월4일이 돼서야 활동을 시작했다"며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했던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종료시점 역시 2017년 2월4일이 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성주 기자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불어민주당 기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성조 위원장과 이언주 간사 및 법률,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산소통을 끌고와 참석한 기습기살균제 피해 어린이가 어른들 사이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야3당,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 제11공수 특전여단의 광주시가행진 투입 기획 등 이유... "차대통령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모두 166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해임촉구 결의안에서 박 처장 해임 촉구 이유에 대해 ▲제11공수 특전여단의 광주시가행진 투입 기획 ▲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거부 ▲정무위 등 국외의정활동 방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개 지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국민의 뜻과 대한

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박 처장이 최근 6.25전쟁 기념 광주시가행진에 과거 계엄군으로 투입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점을 들고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를 작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박 처장은 도저히 정부기관의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 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국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주 원내수석은 결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협치를 저해한 박 처장은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수석 또한 "협치는 야당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박 처장은 5년 5개월동안 스스로 용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꼭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원내수석은 "이것은 국민의 뜻이니 청와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임촉구결의안의 경우 일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성주 기자

##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로 당 내분 진정 국면

### 새누리당 사무총장 임명된 지 21일, 경질 통보 4일 만에 물러나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3일 자진 사퇴했다. 사무총장에 임명된 지 21일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질 통보 4일 만에 물러난 것이다. 권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권 총장은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가 비대위 회의에 올라오자마자 일괄 복당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전격 결정했다. 문제는 이 때부터 터졌다. 김희옥 비대위 원장이 표결 강행 등 불만으로 돌연 당무를 거부하고 침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친박계는 이를 빌미로 공세에 나섰다. 친박계 3선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김태홍, 이장우, 김진태, 이완영, 이우현, 박덕흠 의원과 초선 강희상 의원 등 총 8명은 복당 결정 이튿날 회동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조속히 소집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권 사무총장에게는 이번 복당 사태 주도 책임을 물어 공식 사퇴를 촉구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당무 거부 사흘째인 19일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무 복귀와 함께

권 총장의 경질을 최종 결정했다. 그러자 권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권 총장은 경질 방침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나는 비대위 의결을 거쳐 임명된 것이기에 내가 가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해임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계는 지난 20일 2차 무력사위에 나서 ▲복당 사태에 대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공식 해명 ▲권성동 사무총장의 조속한 퇴진 등을 요구했다. 결국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과 권 총장간 중재에 나섰고, 권 총장은 이날 "정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나의 사퇴가 복당 결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과 유감을 표명한 만큼 저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판단해 자진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며 물러났다. /이성주 기자

## 더민주, 8월16일 도당 개편대회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는 8월 16일 도당 개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현재 추대로 결정할 지, 지역위원장 간 경쟁을 통한 경선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 정가는 이춘석 의원(익산갑) 추대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도당 개편대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전북 민심 회복 등 당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린 민심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까지 영향을 볼보듯 뻔해 도당 위원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도당 위원장 경선은 오는 2015년에 치러질 경우 지역위원장 간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도당 위원장 경선은 지난 2015년에 치러질 방식이 유력하다. 당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구단은 전국 대의원 66명, 권리 당원 6만643명으로 확정됐었다. 또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의 투표비율을 합산해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선출했었다. 전국 대의원은 경선 당일에 현장에서 직접 투표했다. 권리 당원은 자동응답전화(ARS)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며 강제적 권리 당원 ARS투표와 자발적 권리 당원 ARS투표를 병행해 진행한 바 있다. /신광영 기자

## 정운천, 산자부에 탄소산업과 신설 촉구

국회 정운천(전주,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산자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탄소산업은 미래핵심소재산업인 만큼, 탄소산업과를 신설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북·경북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소밸리 예비타당성 심사가 당초 1조원 규모에서 2천억 규모로 대폭 삭감됐다"면서 "미래 탄소수요를 감안해 예비가 통과돼야 하고, 전북과 경북의 사업내용을 1대1로 조정해 두 지역의 갈등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는 10년간 탄소산업을 키워낸 증가점이다.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영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산업은 자동차, 항공기, 방산산업의 핵심소재산업이며,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북과 경북의 상황을 감안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탄소밸리조성사업은 전북과 경북이 시도 상생협력 공동사업으로 2천억원이 투자되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축소와 전북·경북 사업내용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KSTF에서 타당성조사 진행중이며, 오는 7월 초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 추미애 의원, 오는 26~27일 전북 방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추미애 의원이 오는 26~27일 양일에 걸쳐 전라북도 방문한다. 26일에는 전라북도당 관계자와 총선 출마자, 당소속 도의원 등을 만나 총선 참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 27일 오후에는 새만금미래관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의 현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특히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동서축과 남북축 도로건설과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공항건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의논할 예정이다. 이후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전라북도 현안을 청취하고 지역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미애 의원은 최근 당대표 1호 공약으로 호남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예산과 인사를 직접 행하겠다"고 언급해 송 지사와의 면담이 주목받는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남북교류위 제주해군기지 견학

전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이호근 의원)는 22일 제주해군기지와 4·3평화공원 등을 견학했다. 위원 4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4명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해 해군기지의 중요성과 지역 군사동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호근 위원장(고창)은 "그 동안 말로만 들던 제주해군기지와 4·3평화공원 등을 방문해 보니 해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울러 이번 방문이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맞춤형 보육 정책' 보완책 주문

야당은 23일 다음 달로 예정된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을 '졸속시행'으로 규정, "국민과 정면대결 하는 식의 일방통행 하는 식의 국정운영"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은 정부 맞춤형 보육 강행에 반발, 이날부터 집단 휴원에 돌입한 상황을 언급하고 "국민과 정부가 정면 대치하는 상황이 결국 초래되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 보완한 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성주 기자